



【검토보고서】

2018.10.11.(목)
제298회 임시회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도시발전과장)

나. 제출일 : 2018년 10월 2일

2. 제안이유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3조~6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주민협의체 설립 요건과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제시함(안 제8조)

마.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결정방법, 지원금액의 환수

- 및 용자지원의 조건 등에 대하여 제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존속기간에 대하여 제시함(안제12조 및 제13조)
- 아.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등에 대하여 제시함(안 제14조)

4. 기타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나. 입법예고 : 2018.08.13. ~2018.09.03. (21일간)
- 다. 부서협의 :
- 1) 협의기간: 2018.06.08. ~2018.07.27. (49일간)
 - 2)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붙임: 결과통보서)
 -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붙임: 결과통보서)
 - 규제심사: 심사대상 아님(붙임: 결과통보서)
 - 재정운영위원회: 수정가결(붙임 : 심의결과 통보서)
 -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 양주시의 공동화 및 쇠퇴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추진현황

1)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개요

- 내용 :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 공모 지원
- 수립대상 : 양주시 전지역
(인구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이 쇠퇴되는 지역)
- 용역기간 : 2018. 5. 29. ~ 2019. 5. 28.
- 용역비 : 370백만원
※ 확보예산 : 390백만원(도비 90백만원, 시비 300백만원)
- 용역사 : (주)세일종합기술공사, (주)일신이앤씨,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2)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계

(단위: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재원조달	5,210,000	5,210,000	5,210,000	5,210,000	2,210,000	23,050,000
보조금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	12,000,000
지방세수입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세외수입	410,000	410,000	410,000	410,000	410,000	2,050,000

※ 재원조달방안: 2019년부터 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

-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167억)
 - ⇒ 국비:도비:시비(60%:12%:28%)
 - 국도비(국비100억, 도비20억) : 사업선정시 4년동안 120억 교부 예정
 - 자체재원 : 도시재생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이상 : 1,800백만원
 - 개발부담금 중 시귀속분의 20% : 410백만원

다. 주요 내용

-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조례의 구성 〉

구분	내용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조례제정 목적
제2조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사업추진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1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1조	융자의 조건	융자 지원의 조건을 규정
제12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제14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동이용시설(안 제2조)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공동택배함,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주민쉼터, 야외공연장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 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제6조)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시책 및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주민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 이하생략-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안 제7조)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과 관련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시장은 도시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와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5) 주민협의체(안 제8조)

제8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

6) 사업추진협의회(안 제9조)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7)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9)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text{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원래의 대지면적})$$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10) 시행규칙(안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등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주민협의체 설립, 사업 추진 협의회 등에 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조례 제정은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시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확보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